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의안 번호	440
----------	-----

제출연월일 : 2009. 2. 23.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시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함(안 제2조).
- 나.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절차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 다. 지속가능발전책임관과 사무기구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 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 마.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위원회 운영경비 필요
-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합의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09. 1. 23. ~ 2. 12. / 접수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절차)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전략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이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한 후 실·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 수립지침을 받은 실·국장은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
2. 이행계획의 추진목표
3. 분야별 실행계획, 필요한 자원 및 그 조달방법
4. 그 밖에 기본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은 이행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그 계획을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행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
2.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기본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당초 이행계획의 소요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6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 ① 법 제8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지속가능발전책임관으로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은 위원회 사무기구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기구는 정책기획관에 두되, 사무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절차 등) ① 시장은 2년마다 최근 2년간의 이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 결과를 받은 위원회는 기본전략과 이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계획 수립·변경 등에 따른 통보 기간·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은 별표와 같으며, 그 통보시기는 당해계획안과 관련된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 상정 이전 또는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확정 이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검토결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전략 또는 이행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
2. 그 밖에 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검토결과대로 이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이행계획에 대한 점검결과 및 그 당시 국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위원회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최근 2년간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6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추진상황 검토결과
2.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분야별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4.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5.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11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관리실장, 경제과학국장, 복지여성국장, 환경녹지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전문위원회 간사, 지속가능발전책임관으로 구성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도시기반·관광전문위원회, 생태·환경전문위원회, 경제·산업전문위원회, 사회·복지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의 의견과 전문분야·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각 전문위원회에 배정하여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11조제2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6조(민관협력의 증진)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할 때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 범위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시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중·장기 행정계획(제8조제1항 관련)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업실천계획
3. 「산림기본법」에 따른 지역산림계획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
5.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
6.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시·도환경보전계획
7.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8.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전실천계획
9.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지역토양보전계획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12. 「주택법」에 따른 시·도주택종합계획
13. 「지하수법」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1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혁신발전계획
16. 「국토기본법」에 따른 지역계획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1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1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광역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20.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21.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22.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2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

2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2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26.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계획
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28.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9.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3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시·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
3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32.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33. 「교통안전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3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시책
3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관 계 법 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이하 “의제21”이라 한다),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 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이하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이라 한다)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에너지·교통·국토이용·농업, 빈곤·건강·교육, 생태·물·해양·산림 등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전략과 원칙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4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방법·절차와 정부 내의 업무분담체계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란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방지속가능성보

고서”로 본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및 절차와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란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기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지방이행계획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 및 그에 따른 이행 계획,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⑤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고, 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행정계획의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동향)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산림기본법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5.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7.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10년마다 이를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절차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5년 단위로 관할구역의 산업집적의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의 집적 등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에너지기본법

-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역계획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 제14조의3**(시·도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도환

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환경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도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시·도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습지보전법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조사(이하 "습지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이하 "기초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습지보전에 관련된 계획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3.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습지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은 기초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초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기초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항 내지 제5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오염토양의 정화 및 복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토양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9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인구, 주거 형태, 산업 구조·분포 및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概況)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확보 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산업입지공급계획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입지 공급규모의 산정방법
3. 시·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공급전망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시·도지사는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즉시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제8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 지하수법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지역관리계획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관할지역 지하수의 수량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기본계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설의 목적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3. 규모 및 형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이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6. 댐건설비용(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포함한다)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댐건설사업시행자
 8. 사업기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제6조**(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이하 "지역혁신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지역혁신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혁신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현황 및 발전역량의 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을 위한 여건개선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혁신을 위한 시책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2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적합하게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협의 등에 응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의 지역혁신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국토기본법

제16조(지역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수도권발전계획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광역권개발계획 :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역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3. 특정지역개발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

4.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히 열악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구

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
 2.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광역개발권역에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광역개발사업계획(이하 "광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2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광역개발권역으로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관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중에서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광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작성한 광역개발계획을 제출받거나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식량용 쌀과 맥류의 자급률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3.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및 우유의 자급률

④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7조(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수도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광역시·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⑦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
9. 중수도(중수도)의 개발·보급
10.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의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 ⑧ 환경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공업용수도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면 그 공업용수도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⑨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하천법

-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④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9조는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⑦ 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육시설,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당해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4. 당해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 ②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연공원법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③ 둘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4.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5.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6. 제1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7. 제1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8.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9.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개발제한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관계 시·도지사

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④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나 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여도 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시·도지사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공작물의 설치 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제1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할 때 관리계획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본원칙,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계획서 및 도면의 작성기준,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하수도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4. 합류식하수관거와 분류식하수관거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6.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계획 및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계획 및 처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시·도종합계획 및 시·군·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 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군·구종합계획 및 시·도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 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제18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종합계획 및 시·도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종합계획 및 시·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관법

-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

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2.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3.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4.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다.

□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세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

과 관련되는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④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 및 시책을 세울 때에는 제1항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년 3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2월 23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9년 2월 24일
3. 상 정 일 자 :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9. 3. 12)
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장시성)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시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함(안 제2조).
- 나.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절차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 다. 지속가능발전책임관과 사무기구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 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 마.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0조).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박춘용)

○ 본 조례 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이행계획, 지속가능발전책임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등 본문 20조와 부칙으로 축조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기본전략 수립 절차를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이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책임관 지정,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점검·평가를 제8조에서는 행정계획 수립 절차를,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보고서 작성을, 제11조부터 제20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본 조례 안 검토결과

본 조례는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계획의 수립과 점검, 35개 대전광역시 중장기 행정계획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서 우리시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안 제15조 전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여건을 고려 할 경우 전문위원회 명칭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고

부칙에서 기존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있으나 민관협력 실천기구인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와의 유사기능 중복 방지 등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